

‘잃어버린 10년’ VS ‘뒷걸음질 6개월’

내달 6일 18대 국회 첫 국감...與野 전은 고조 교과서 개편·중부세 등 쟁점별 난타전 예상

18대 국회 첫 국정감사(10월6일~25일)를 앞두고 28일 정치권에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 10년만에 정권교체가 이뤄진 뒤 처음 열리는 국감으로서 전, 현 정권에서 대한 상호 공격이 빚날 것으로 예상되면서 정책 국감은 사라진채 정치 공방으로 흐를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전, 현 정권에 대한 공격=정권 교체된 지 6개월밖에 안 된다는 점에서 한나라당은 지난 10년간을, 민주당 등 야당은 지난 6개월의 실정을 집중 부각하는데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전·현직 정권의 권력형 비리에 대한 대대적인 폭로전도 예고되고 있다.

한나라당은 참여정부 시절 권력형 비리 의혹 15개를 선정했으며 이번 국감에서 이를 집중 공격해 야당의 공세를 무력화시키겠다는 전략을 세우고 있다.

이에 맞서 민주당도 이명박 대통령의 사촌처형 김옥희씨의 공천개입 의혹 등 현 정권의 '4대 게이트'의 실체를 파헤치겠다고 버티고 있다.

◇이념 논쟁=여야간 이념논쟁은 교과서 개편 논란에서 불거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정부뿐 아니라 여권 내에서도 교과서 개편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공공연하게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교과서 개편 작업에 본격 나설 테세다.

이에 반해 민주당은 정부 여당의 교과서 개편 움직임이 일방적인 국민의 역사인식이나 사회인식을 벗어나는 반시대적, 반민주적 발상이라고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경제 정책=기획재정부와 지식경제위원회에서는 이명박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세계개편안과 각종 감세정책, 공기업 민영화 등을 놓고 정면 충돌이 불가피하다.

우선 중부세 개편안이 핫이슈다. 중부세 완화를 놓고 민주당의 '1% 부자만을 위한 감세' 공세와 한나라당의 '참여정부의 징벌적 과세에 대한 시정'이란 논리가 첨예하게 맞설 것으로 보인다. 정부에서는 산업은행 민영화와 금산분리 및 출자총액제 완화 등을 놓고 한판 승부가 예상된다.

◇대북·외교정책=외교통일통상위와 국방위원회에서는 이명박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과 국민의 정부 및 참여정부 시절 대북 포용정책의 계승 문제가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국감에서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과 금강산 관광객 피격사건에 대한 입장 보고, 미국 지명위원회(BGN)의 독도 영유권 변경에 대한 뒷북 대응 등을 추궁하면서 현 정부의 '외교 미숙'을 집중 부각시키려는 전략이다.

특히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뜨거운 공방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6·15선언과 10·4선언을 계승하지 않은 채 과거 정부가 구축해온 평화교류 기반을 스스로 부정하고 파괴해 남북관계를 경색국면으로 몰아넣었다고 추궁할 예정이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민주, 정체성 논쟁 불붙나

7·6 전당대회 이후 잠잠했던 민주당에 정체성 논쟁이 재연될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최근 노무현 전 대통령의 발언으로 불붙은 '호남당' 논란이 한 축이라면, 지난 25일 이명박 대통령과 정세균 대표의 영수회담을 놓고 일각에서 "야성이 훼손됐다"는 비판이 고개를 들면서 다른 한 축인 좌표·노선 논쟁이 촉발된 듯한 흐름이다.

당장 당권주자였던 추미애 의원은 28일 기자간담회를 자청, 북핵 위기 해결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 중재를 주문한 뒤 "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제대로 잡아주는 게 야당 역할"이라며 "(영수회담에서) 누적인 현안에 대한 국민 목소리를 가감없이 전달하고 답변을 받아냈어야 한다"고 정세균 대표의 선명성 문제를 거론했다.

이를 두고 그동안 현안 언급을 자제했던 추 의원이 영수회담을 고리로 비주류 세력의 구심점으로 자리매김 하기 위한 본격 행보에 나선 게 아니냐는 관측도 있다.

앞서 최문순 의원은 지난 26일 홈페이지 글을 통해 "지금도 (한나라당) 2중대소리를 듣는데 뭘 더 협력한다는 말인가"라고 직격탄을 날렸고, 이종걸 의원은 "정 대표의 온건 노선은 야당 대표로서 위치선정을 잘못한 것"이라고 공개 비판하는 등 당 지도부의 좌표 설정에 대한 문제의식이 제기되고 있다.

제야와 수장이었던 김근태 전 의원과 천정배 의원, 정동영계 일부 등 당내 진보 성향의 원내외 인사 약 50명이 30일 민주당(가칭)을 발족, 진보개혁블록 구축에 나선다는 움직임이 노선·정체성 논쟁을 가



민주당 추미애 의원이 28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현정부에 대해 불능에 빠진 북핵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라고 요구하고 있다. 추 의원은 중재안으로 북핵사찰의 경우 모든 사람이 아닌 필요한 지역과 대상을 특정화할 것과 북한도 의혹 해소를 위해 무조건 거부하지 말 것을 제안했다. /연합뉴스

추미애, “丁대표, 영수회담서 野性 훼손” 선명성 거론 김근태 前 의원 등 진보 인사 50여명도 민주당대 발족

숙화할 것이라는 시각도 적지 않다.

민주당은 "민주당이 야당답지 못하다"는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깔고 선명성을 강도높게 주문할 태세여서 당 주류세력과 직·간접적으로 충돌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는 관측이다. 민주당의 발족을 '비주류 연합체'로 보는 시각도 이 때문이다.

당 안팎에선 합리적 온건노선에 무게를 둔 정 대표, 그리고 신(新)실세로 부상한 386그룹 등 신주류와 비주류세력간에 전

선이 형성되면서 열린우리당 시절 '난닝구 대 뽀바지'의 실용 대 개혁 논쟁이 재연되는 게 아니냐는 성급한 분석도 있다.

노 전 대통령이 최근 자신의 인터넷 토론 사이트 '민주주의 2.0'에 "호남의 단결로는 영원히 집권당이냐 다수당이 될 수 없다"고 글을 올리면서 또다시 수면위로 떠오른 호남당 논란도 당의 정체성과 관련, 두고두고 불씨가 될 수 있는 부분이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수도권 규제 완화, 장기적으로 재앙”

한나라당 송광호 최고위원

한나라당 송광호 최고위원은 28일 “수도권 규제를 완화할 경우 장기적으로 보면 재앙이 온다”고 지적했다.

송 최고위원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움직임과 관련, “경기가 지금 어렵다 보니 반짝효과를 볼 수 있지만 선별해서 풀어야지, 무분별하게 풀어서는 안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수도권에 집중되고 과밀화되는 것은 후손들에게 재앙을 물려주는 것”이라면서 “지금처럼 수도권에 계속 과밀화될 경우 10년, 20년 뒤 교통·인구·공해 문제를 해결하려면 지금 건설하는 돈의 몇십배를 투자해도 원상회복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시장·군수協 “정당공천제 폐지를”

정가 브리핑

○전남도는 29일 낮 12시 서울 여의도 인근 식당에서 지역국회의원 보좌관 20여 명을 초청, “2009년 지역 현안사업 설명회”를 개최한다.

전남도 '지역 현안사업 설명회'

내년도 국고배정을 앞두고 국회 차원의 지원을 촉구하기 위해 열리는 이날 설명회에는 전남도 기획조정실장과 예산담당관 등이 참석, 2009년도 국고지원 건의사업 가운데 아직까지 국고에 반영되지 않았거나 추가로 국고를 확보해야 하는

사업에 대한 설명과 함께 실무적인 협력방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가 2010년 지방선거부터 정당공천제를 폐지하기 위해 1천만명 서명운동 및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하는 등 범국민 운동을 전개키로 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지난 25일부터 이틀간 부산 해운대 파라다이스 호텔에서 열린 민선4기 제3차년도 '전국시장·군수·구청장 총회'에서 '정당공천제 폐지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2010년 지방선거부터 정당공천제를 폐지하기 위한 1천만명 서명운동 및 공청회 등을 실시키로 했다.

협의회는 또 67개 사회복지사업의 국

가 환원을 촉구하는 공동결의문을 채택하는 한편 전국 시장, 군수, 구청장 230명의 서명을 받아 국회와 보건복지부에 전달키로했다.

강운태 의원, 어음법 개정안 발의

○무소속 강운태(광주 남구) 의원은 지난 26일 어음 부도시 형사 책임을 묻도록 하는 내용의 어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강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무분별한 발행으로 인한 연체·고의부도를 막기 위해 약속어음 발행인과 환어음 인수인 미간기에 부도를 내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어음금액 10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어음법 개정안에는 어음 발행시 약정 이자를 반드시 기재하도록 하고 어음 만기를 60일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고 강조했다.

/홍행기·김지희기자 redplane@

민주, DJ·盧정부 재평가 작업 착수

“잃어버린 10년 ‘왜곡 시도’ 바로잡기 차원”

민주당이 조만간 국민의 정부에서 참여정부로 이어진 '민주정부 10년'에 대한 재평가 작업에 착수한다. 민주당의 이같은 움직임은 한나라당이 이 기간을 '잃어버린 10년'으로 규정, '좌편향' 정책을 대한 전면적 제도 수정에 나선데 대한 적극적인 대응 차원으로 풀이된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28일 “지난 10년 동안의 민주정부 성과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통해 현 여권의 왜곡시도를 바로 잡을 방침”이라며 “또 이번 재평가 작업을 통해 전통적 지지층을 복원, 당의 활로를 찾고 미래비전을 모색하자는 복안도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민주 정부 10년 재평가 작업은 민주당의 '뉴민주당' 플랜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김대중(DJ), 노무현 두 전직 대통령과의 관계를 복원하고 정체성을 확고히 해 '집토끼' 재결집을 꾀하려는 측면이 깔려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지난 7월 새 지도부가 구성된 뒤 두 전직 대통령을 잇따라 방문, 관계 회복에 시동을 거는 등 무너진 지지기반 재구축에 주력해왔다.

당 관계자는 “IMF 극복 과정에서의 재벌, 금융개혁, 이후 인위적 경기부양 자체를 통한 펀더멘털 강화가 세계적 경제위기에도

버티는 토양이 됐다”며 “민주주의 면에서 ‘되찾은 10년’이자 경제 면에선 ‘고마워 해야 할 10년’”이라고 규정했다.

민주당은 내달 중 '민주정부 10년 재평가 위원회'(가칭)를 설치, 경제와 남북관계, 민주주의, 인권, 복지, 사회,문화, 환경 등 분야별 평가를 진행키로 했으며, 객관성과 공정성 차원에서 학계 등 전문가그룹과 정책 수요자 등 외부 인사를 포함시키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민주당은 재평가가 완료되는 대로 두 전직 대통령과의 관계 재설정에 나서는 한편 두 전직 대통령의 복당 문제를 매듭짓는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노 전 대통령이 최근 “호남의 단결로는 영원히 집권당이 될 수 없다”라고 발언하는 등 정치현안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는 점 등을 들어 시기상조가 아니냐는 지적도 당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롯데관광 Lotte Tour
1577-3000

무안 → 홍콩 직항 전세기 취항 기념

10월 12일 일 출발시 **동발자 1인 50% 할인**
(단 1회 신청수 10명, 팀 4명)

• **홍콩, 마카오, 성전, 주말 6일 849,000원**
(동발자 1인 425,000원)